

International Migration: The human face of globalisation

Summary in Korean

국제이주: 인간 중심의 세계화

국어 개요

- OECD 특유의 전문 지식에 기초한 본 서적에서는 발언 차원을 넘어 현재 국제이주의 실체를 살펴본다. 이주자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국가정부는 이주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주민의 교육과 노동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국제이주는 국가 발전에 유용한가 아니면 저해되는가?
- 세계 인구의 1 억 9 천만여 명이 출신국이 아닌 외국에 살면서 현대 사회에 참신한 생각, 기업가 정신 및 활기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민 가정 자녀의 교육 실패, 성인 이민자들의 취업 기회 상실, 그리고 불법 이주라는 어두운 면도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 때문에 이주문제는 정치 개혁의 도화선이 되거나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변할 수 있다.

경제, 인구 통계, 정치, 국가 안보, 문화, 언어에 더하여 종교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관련하는 국제 이주처럼 논란을 일으키는 사안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가 결합되어 국제 이주가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국가와 떠나는 국가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져오는 이점을 극대화하는 정책 개발에 복잡성이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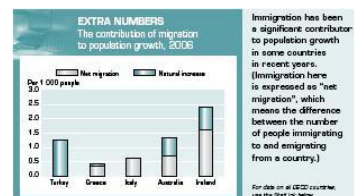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 이주 문제는 끊임 없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항상 새롭고 나은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수년 후에 인구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이민자 유치는 계속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이미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교육, 고용 등의 부문에 이주자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가 OECD 국가들이 안고 있는 예외적인 과제다. 1970년대 중반부터 OECD 국가에서 이민자 비중은 거의 배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8.3% 정도에 이른 반면 저개발국에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수효와 추이

세계 인구의 3%에 좀 못 미치는 1억 9천만여 명이 출생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다. 이 수치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민자가 이주하는 국가 수가 비교적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호주, 스위스는 이민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3%를 넘지만 핀란드, 헝가리는 3% 대에 불과하다.

대체로 이주는 (꼭 '부유한' 나라가 아닌) 본국보다는 비교적 잘사는 나라를 향한 인구 이동의 역사이다. 이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인구처럼 개도국 간에 이동하는 인구도 꽤 있음을 뜻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각각 '북'과 '남'으로 가리킨다면 세계 이주자의 1/3 정도는 북에서 북으로, 나머지 1/3은 남에서 북으로, 마지막 1/3은 남에서

추가 수 이주 기여도



남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 관리

국가마다 이민 성격은 크게 다르다. 미국, 프랑스는 합법 이민의 대부분이 가족 관계로 이뤄지는데 외국에 이미 정착한 가족과 합류하거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이민이다. 반면, 스위스는 이민자의 대부분이 일할 권리가 있거나 거주하는 이유로 이주한 경우다. 또 다른 차이는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은 전통적인 ‘정착 국가’의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영구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EU 같이 여러 국가 간에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은 이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모든 요인들이 고급 및 저숙련 인력에 대한 국가적 수요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부의 이주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인구 이동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직접 관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가 이민가족과 합류할 권리를 인정한다거나 일정 수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인다고 약속했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에서 거주할 자격이 실제로 주어진다. 아울러 많은 국가에서 불법 이민 현상이 논쟁을 일으키는 사안이 되면서 합법 이민마저 국민의 반감을 사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불법 이민이 생기고 특히 유럽 국가의 이주자들이 성공적인 사회 통합에 실패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해에 많은 OECD 국가에서 가족이민과 같은 전통적인 이주 형태를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이민자들이 스스로의 사회통합에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데 새롭게 역점을 두고 있다. 언어 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국가의 행정체계와 밝아야 할 절차를 알려주는 정보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주자에게 새로운 이민국에서 삶을 꾸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보기술, 의료,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는 특유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이민을 장려하는 소위 ‘사전예방적’ (pro-active) 이주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꽤 나타난다.

이주와 교육

교육은 이민 가정 자녀가 인생의 대부분을 새로운 이민국에서 보내도록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교육은 현지 언어 습득과 평생에 걸쳐 필요할 기술과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민자와 현지 지역사회의 사회 및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교육을 통해 이민 아동의 문화적 통합을 장려해야 되는지는 다루기

힘든 문제로 많은 국가에서 격렬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민자 자녀의 학업 성취도는 어느 수준인가? OECD 국제학생 프로그램인 PISA 에 흥미로운 사항이 몇 가지 나타난다. 2006 년 PISA 평가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이민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이민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모든 면에서 현지 학생에 맞먹었던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는 훨씬 뒤쳐진 수준이었다. 덴마크는 본토박이의 7%가 최상위권에 들었던 반면 이민 2 세는 1%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에 답하기에 앞서 이 수치가 평균치임을 알아야 한다. 현지 아동 인구처럼 이민 아동 인구도 가지각색으로 구성된 만큼 이민 아동의 평균치가 낮게 나온 국가라도 성적이 뛰어난 이민자 자녀는 많이 있는 것이다. 이민 아동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는 가정 환경, 언어 능력, 지역의 교육제도에 마련된 외국인 학생 지원 체계다. 이민자가 정착하는 국가의 입학 정책도 중요할 수 있다. 호주처럼 이민자 수용에 선발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이주자들이 더 교육을 받고 수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점은 이주자 자녀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

이민 아동의 잠재능력 실현에 교육제도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민 아동이 현지 언어 습득을 순조로이 시작하려면 아동 특유의 언어습득능력을 이용하도록 유아 보육 및 교육에 일찍부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교육과 보육을 혼합한 유치원(Kindergarten) 제도는 중대한 발달단계에 있는 빈민 가정의 유아에게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이후에는 학교 내 특별 준비반을 통해 이민아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교육과정에 들어가기까지 이러한 지원을 얼마 동안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민 아동의 빠른 현지 언어 터득이 가져오는 혜택에 대한 언쟁은 없지만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는 덜 된 상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이민 아동은 일반 교육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교적 단기간의 언어 집중교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언어 수업과 병행하면서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계의 이민자 자녀뿐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늘어나는 이주 현상도 살필 만하다. 출생국 외 다른 국가에 입학한 학생 수는 70 년대 중반 이후로 4 배 이상 늘어 270 만 명을 줄 웃돈 수준이다. 많은 국가의 정부와 대학들이 이 수치가 더 늘길 바라는데 그 첫째 이유는 외국학생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간에, 그리고 점점 다문화되는 사회 구성원 간에 상호이해 촉진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그 다음은 국제학생이 큰 사업을 이루기 때문이다. 끝으로, 해외 유학은 수용국에서의 더 오랜 체류를 위한 첫 걸음일 뿐, 장기적으로 고속런 이민자 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증가

본인 국적 외 다른 국가에 입학한 전세계 학생 수



이주와 근로

대체로 국가정부들은 이민자들이 일하는 것을 원하는데 때로는 경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로, 호텔, 레스토랑, 농업 등의 경제 분야는 이민 인력에 크게 의지한다. 그렇지만 이민 인력이 보는 혜택도 있다. 이민자의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이들과 가족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줄이고 사회와 공동체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24 개국 대상의 OECD 자료를 보면, 2008 년도 경기침체 이전까지 이민자는 현지인과 비교해 고용률이 비슷하거나 때로는 나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 본토박이는 이민자보다 고용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민자가 특히나 경기 둔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에 노출되므로 경기 침체기에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민자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흔히 이민자는 본토박이에 비해 자격이 지나치게 높다. 이민자 고용 문제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고용인이 해외 자격증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현지 자격증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민자가 현지 언어를 충분히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와 관계가 단절되어 알맞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행위지만 유감스럽게도 차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이민자와 이민자가 사는 국가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정부가 이민자 고용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도입했고 이의 일환으로 언어 학습 제공, 후견인 제도 수립, 해외자격증 인정을 위한 조치 등을 행했는데 국가마다 그 성공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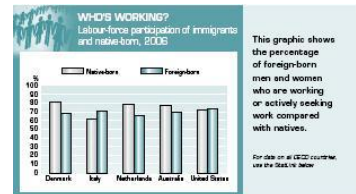
이주와 경제발전

이민자가 정착하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주가 이민자들이 떠나는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개도국 입장에서 이주는 축복이면서 저주일 수 있다. 이민자 본국으로의 자금 송금과 해외 계약 및 경력은 축복이지만 최고의 국내 인재가 떠나는 것은 저주가 된다.

부정적 측면을 보면, 우선 고급인력과 전문인력 상실인 ‘두뇌 유출’이 이주의 가장 큰 위험의 하나로 간주된다. 물론 이러한 위험이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다. 사실 이민자가 해외에서 귀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고국에 가져오는 혜택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다. 그렇지만 특히 개도국의 의료보건 같은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 상실은 개도국이

누가 일하고 있는가?

2006 년도 이민자와 본토박이의 노동시장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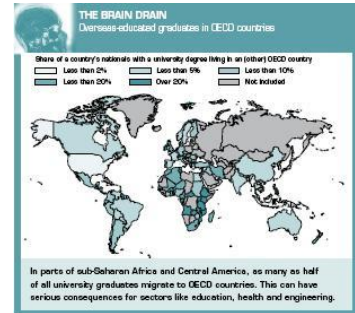


당면하고 있는 의료보전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문제이긴 하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민자의 자금 송금은 많은 개도국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은 2008년 개도국으로의 해외 송금 규모를 최소 2400 억불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민자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현금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제 금액은 거의 확실히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송금 규모가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외 송금이 경제성장 촉진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지만 개도국의 빈곤 감소에는 그래도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뇌 유출

OECD 회원국의 해외대학 졸업자



본 개요는 출력 페이지에서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StatLink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oecd.org/ins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OECD 2009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